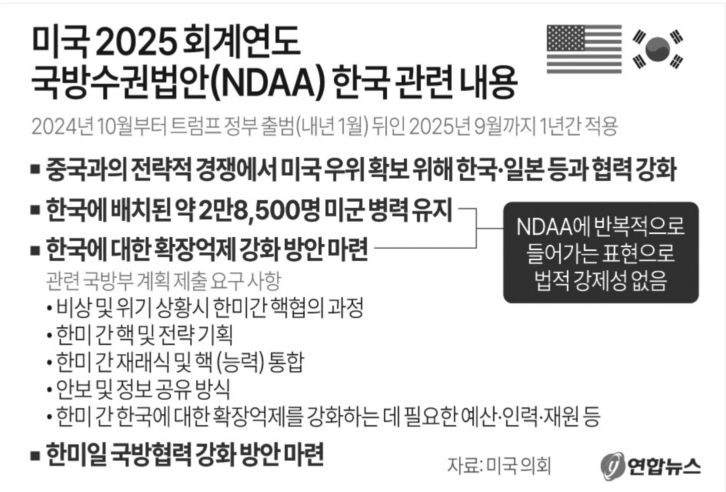
#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

## 핵우산 제공…한·미·일 국방협력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

## '中과 전략경쟁서 우위' 확보 위해 한일과 안보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8950억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NDAA 단일안에는 ▲1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하위직 군인에 대한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내년 1월)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하원은 이날 낮 찬성 211명, 반대 207명으로 NDAA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번 주 중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인권침해 범죄 또 발견

## 군병원 영안실에 '고문 흔적' 시신 40여구 발견…반군, 고문 관련자에 현상금

2대에 걸쳐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인권침해 범죄의 증거가 또 발견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반군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에 위치한 하라스타 군 병원에서 시신 4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군이 공개한 영상 및 사진에 따르면 피가 묻은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들은 냉동실 안에 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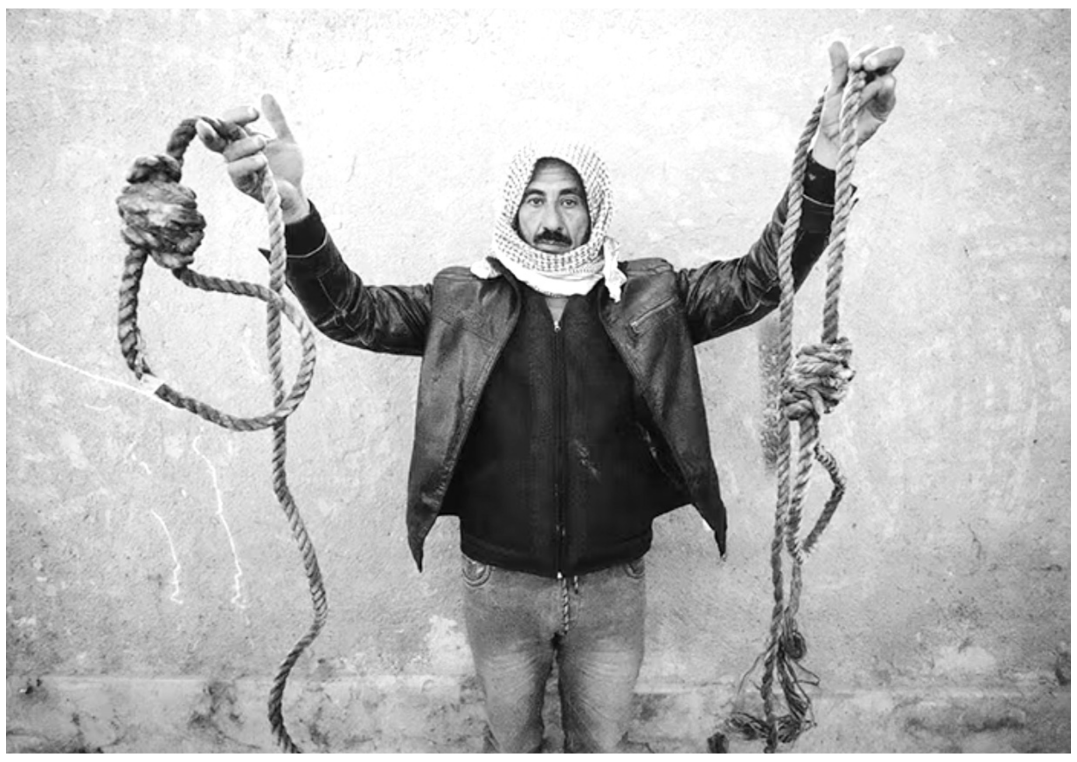
시신들의 부패 상태는 상이했지만, 일부 시신의 얼굴과 상체에선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반군은 군 병원 직원의 제보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군 병사 무함마드 알 하즈는 "시신보관소의 문을 열자 끔찍하게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고문과 관련한 증거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전날 반군이 공개한 다마스쿠스 인근 세드나야 교도소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사람의 뼈를 부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철제 압축기가 확인됐다.


시리아 세드나야 교도소에서 발견된 밧줄. /연합뉴스

알아사드 대통령은 30년간 집권한 부친에 이어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했고, 시위가 무장 반란으로 커지자 염소·사린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의 군과 경찰 등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권 단체 국제 앰네스티(AI)가 '인간 도살장'이라고 규정한 세드나야 교도소에선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3만명의 수감자가 고문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감자들은 군사법원에서 1~3분 만에 형식적인 재판을 받은 뒤 사형선고를 받는 등 사법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리아 반군의 주축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수장인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이날 고문 등 인권침해 범죄와 관련된 군과 정보기관 간부들에 대해 현상금을 걸었다.

알졸라니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시리아 국민을 고문한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 북한 "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가 된 소식을 상세히 알렸다.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며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울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신문은 혼란스러운 남한 내 모습을 부각하려는 듯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사진 21장도 지면에 실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거나 항의하는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군에 반발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한국, 정치혼란 장기화 우려…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

## 일본 언론 지적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한국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 내정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마이니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 부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다며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은 유례없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